



청년·서민
주택난
2~3면

이재명 지지율
하락 이유
4, 5면

인도 파키스탄 반란 5면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8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9면
노란봉투법 후퇴 반대 9면

한국에 다시
미국 핵무기가?
10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노동자 등 서민
12, 11면

중국과 서방,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시대
6~7면

미국 핵무기

한국 재배치

반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강동훈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가 또다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시점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지난해 9월 연평균 27만 호씩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실적은 서울시의 목표치의 19퍼센트, 수도권은 24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 경마장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나 지역 유지 반발 등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정부는 국민의힘 등 우파들이 주장해 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일부 수용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 주고(75→70퍼센트), 공공재개발·재건축 동의율도 완화(67→60퍼센트)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더 늘린다고 하면서도 서민 무주택 가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대책, 즉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은 발표 내용에 없다.

8·3 세제개편안도 역풍을 맞고 있다.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이른바 '뽕뽕한 한 채'), 비거주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고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가 20억원의 고가 주택까지 면제해 주면서 오히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겹치며 민주당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지자 결국 정부도 "확정안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안 그래도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세제 개편안이었는데 더 큰 구멍이 뚫리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금 강화와 공급 확



값비싼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노동계급 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대는 노동계급 주택 문제 대책이 될 수 없다. 설사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대다수 노동계급 대중의 가구는 무주택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차피 대다수 노동계급이 구입할 수도 없는 고가 주택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한들 대다수 노동계급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일부 고임금 노동자나 고소득 중간계급만이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뿐이다.

수도권 집중과 청년 주거 문제

이런 서민 주거 문제는 특히 청년층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년 대다수가 소득과 자산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제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불균등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중심지인 대도시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생산 중심지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노동력 인구를 집중시키고,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 주택난이 벌어진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도시들이 급성장했고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특히, 한국은 후발 자본주의 나라여서 국가가 개발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

과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왔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계속돼 이미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에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유입 인구는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8퍼센트에서 2024년 56퍼센트 수준까지 높아졌다. 전체 인구보다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이 가중됨에 따라,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위해 대부분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만, 월급을 수십 년 모아도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서울에서 평균 수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고시원·컨테이너·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청년 가구 비율은 5.3퍼센트로, 전체 2.2퍼센트보다 높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의 불만을 사는 이유는 서민 주거 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내 집 마련의 꿈'

흔히 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은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복원'이 얘기된다. 월세나 전세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주거 상향 이동 과정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등 우파가 주택 공급 확대를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다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는 '유효수요'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은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유층의 투기용 주택 수요나 충족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택 문제의 대안이 내 집 마련이라고 보지 않는다.

150년 전에 쓰인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많다.

19세기 말 독일 대도시의 주택난도 매우 심각했다. 대다수 사람들이 주택이 없었고, 싼 임대료를 찾아 악취 나는 지하방에 살거나 비좁은 방에 여러

주택 문제의 근본적 대안

노동계급의 주택 문제는 시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앞서 봤듯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은 비싼 집을 추가로 살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득이 될 뿐이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남아 있는 한 이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조장하는 동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구직자 처지로 내몬다. 그러면 애써 마련한 주택도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 투기와 주거 문제를 완화하려 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저렴하면서도 살 만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수는 2,262만 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 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퍼센트 정도다. 그러나 공공주택 중 분양 전환 주택과 민간 임대 주택 지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5퍼센트(119만 호)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당수는 그 질이 매우 나쁘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싼 수준이라 청년과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당수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비좁고 청년과 서민층이 길거리에서 나앉는 것을 막는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들이 어렵사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해도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안가 비싼 민간 임대 주택을 구해야 한다. 대학 기숙사도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서 상당수 대학생들은 60만~70만 원이나 되는 비싼 월세를 내고 주변 대학가에서 자취를 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러니 상당수 청년들이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이나, 곰팡이가 피는 지하방 등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것도, 1인 가구의 경우 고작 14제곱미터(약 4평)에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추는 정도인데 말이다.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으로 국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예컨대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며 일어난 혁명이나 준(準)혁명적 상황이 벌어지자, 노동계급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국가가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는 1950~60년대 호황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노동계급의 불만도 잠재우고 주거비를 억제해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정부 지원으로 가능했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공공개발은 1980년대 말 이후 공공성이 조금 생겼다.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생긴 것이다. 1980년대의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자 운동 덕분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자 하는 압력이 끊임없이 작동한다. 특히, 각국 정부가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기존의 공공주택을 민간에 매각(민영화)했다. 그 결과 공공주택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1980년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2퍼센트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17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재정 지원이 삭감되면서 노후화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질이 떨어졌다. 쥐가 나오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토지의 불로소득을 몰수하고 공익적인 토지 이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려면, 토지 소유주들(대부분이 자본가들이다)에 맞선 매우 큰 노동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앵겔스는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대도시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실의 ‘주택난’을 모두 즉각 시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 그런 일은 물론 오늘날의 소유자들로 부터의 물수를 통해서만, 즉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까지의 주택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가옥에 수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공 복지를 위해 필요한 그러한 조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전취하자마자, 마치 오늘날의 국가에 의한 다른 물수와 수용이 그렇듯이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강조는 앵겔스)

웹사이트에서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도 보시오.



사진 출처: 인문360

치솟는 집값 때문에 청년들은 고시원 같은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 수밖에 없다

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이때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앵겔스는 “‘주택 문제’에 대한 대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의 해결의 핵심은 노동자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앵겔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 문제를 이렇게 규정한다. “현대 대도시 노동자들과 일부 소부르주아들의 주택난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교적 작은 이차적 폐단들 가운데 하나”다.(강조는 앵겔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낳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신기술 도입과 산업 격변이 일어나고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를 전전한다.

“따라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가옥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

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앵겔스)

게다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은 필연적으로 경기 변동을 만들어 내고, 주택 경기도 경기 변동과 연동해 움직인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치솟는 집값을 따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들어서 서민층이 집을 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앵겔스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 자체, 즉 노동자 착취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대안’들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61퍼센트밖에 안 된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44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 비율이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주택 공급 확대가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주당 전당대회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김문성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침묵했던 이들이 취임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는 것은 권력 투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반명 연합 자체도 어떤 개혁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진 않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장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민주 수호나 국힘 견제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에 지지를 보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 진정성이 없는 구호에 그친다면(위선), 민주 수호 가치에 공감했던 여러 집단은 파편화된 개별 이익을 좇아 ‘탈동원’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후퇴 조짐,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홈플러스 사태 확장 개입 등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반국우 중도보수 포섭(우대) 전략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그런 진보 어젠다보다 중도보수적 어젠다(가령 메가프로젝트)에 더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대중 투쟁 덕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치 지형이 좌경화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우파 전체가 안도하고, 선거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등이 그 덕을 봤다.

최근 내각의 세력관계도 우파의 우위를 보여 준다. 재계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요구한 노동시간 연장(메가특구법에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등에 대한 산업부 장관 김정관과 노동부 장관 김영훈 사이의 이견



김민석 당선은 흔들린 당청 관계를 좀 더 봉합한 채로 중도보수 포섭 전략을 지속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 사례다.

이재명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며 외견상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권 제약을 투자의 전제조건처럼 말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정부의 무게중심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내놓은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 조현이 “현실성 없다”, “조율된 바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란 전쟁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전의 줄타기보다 미국의 요구를 (얼마간) 수용하려는 듯한 언사들이 나온다.

중도보수 언론이 검찰 개혁 등 “과격한 개혁 노선 때문에” 중도층 이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틀린 이유

다. 본래 의미의 개혁은 노동계급의 착취와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개혁은 존재한 적이 없다.

개혁 부진과 난맥상이 지지율 하락 불렀다

정부·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은, “개혁이 과해서”라기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혁을 빙자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만 열중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찰 ‘개혁’이 대표적이고, 나머지 개혁들도 정치 안정화를 통한 경제 성장(자본 축적)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의제들이었다.

외형적으로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에 바탕했던 주식시장 활황도 멈췄다. 주가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이 동조하듯 우하향했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주식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이재명 자신이었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고물가·생활

고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 실질적 개혁은 피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만 키웠다. 그 결과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았다.

국민연금에 올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손실을 봤어도 문제고 안 봤어도 문제다. 후자라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고, 전자라면 주식시장 부양에 노후 연금이 동원돼 큰손 투자자를 위해 희생한 꼴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세대는 문재인 정부에 치를 떨었다. 환멸의 해일이 일어났고 윤석열이 득을 봤다. 그런데 지금 주식 거품이 꺼지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 청년층의 이반은 상층 중간계급과 지배계급의 부동산 증세 반대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상층 중간계급)의 이익을 더 늘려 줘야 지지율이 다시 오른다는 주장은 계급적 데마고기다.

정청래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좌절된 것에는 심통을 부려도 개혁 부진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정청래 자신이 자당 의원 100여 명이 찬성한 조희대 탄핵 염원을 외면했다.

권력 다툼 와중에도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의 중도보수 포섭(우대) 전략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당선 의미는 흔들린 당청 관계를 좀 더 봉합한 채로 그 노선을 지속한다는 것에 있다.

이재명의 위기를 기회 삼으려 몸부림치는 국민의힘 극우 지도부

8월 15일 광화문 사거리와 올림픽공원 두 곳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수만 명이 집결했다. 불길하게도 이재명 정부 하 생활고를 이용한 선동도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반동의 기회로 삼으려 총력 동원을 한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반란이 확산되다

우기를 맞이한 남아시아에 정치적 폭풍이 일고 있다. 시위와 반란이 천둥 치는 먹구름처럼 인도 아대륙 곳곳을 뒤덮고 있다.

파키스탄 군사 정부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분출한 저항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카슈미르 항쟁이 파키스탄 전역의 불만과 연결돼 더 광범한 반란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한 것이다.

아와미공동행동위원회(JAAC)는 중무장한 경찰이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에서 6월부터 8월 초까지 89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자치권이 있는 이곳에서 실시된 총선이 긴장 고조의 배경이 됐다. 시위 단체들과 쫓겨난 전 총리 임란 칸의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은 선거가 사기극이라며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실권자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는 탄압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기자들에게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를 즉시 떠나라고 통보한 것이다.

무니르는 이번 소요의 근저에 있는 문제들이 파키스탄 전역에 만연해 있음을 안다. 민주주의의 부재와 높은 청년 실업률이 그것이다.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에서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청년 실업률이 약 27퍼센트에 이른다.

다니쉬 칸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 운동은 번지는 법입니다. 파키



인도 청년들의 '바퀴벌레 운동'은 장관 퇴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스탄 지배층은 카슈미르의 핵심 불만이 카슈미르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위 대부분을 조율하는 JAAC를 “인도의 자금을 지원받는” 테러 조직이라며 불법 단체로 지정했다. 자영업자, 학생, 몇몇 정치인들로 구성된 JAAC는 개헌과 경제 개혁을 요구한다.

파키스탄 국가는 카슈미르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인도 국가가 자행하는 탄압을 비난한다.

그러나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파키스탄 국가는 많은 카슈미르 사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를 입증해 보였다.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카슈미르의 진정한 이익에는 무관심하며, 카슈미르를 자국의 제국주의적 책략의 교두보로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카슈미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 하에서 통일을 이

룰 권리가 있다.

카슈미르를 넘어 파키스탄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가격 상승과 연료비 상승, 청년 실업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부자들의 조직적인 부패와 횡령이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인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주류 언론은 금세 잊은 양 굴고 있지만 몇 주 전 인도에서는 ‘바퀴벌레 운동’이 나렌드라 모디의 극우 정부에 크게 한 방 먹였다. 당시 청년·학생 수만 명이 몸싸움으로 경찰 통제선을 뚫고 의회로 가서 시위를 벌였고, 결국 모디는 교육 부 장관을 사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업, 임시 비리, 부자에 유리한 체제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최근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인도 북동부 아르칸드 주(州)에서 수많은 학생과 실업 청년들이 고소득 공직이

부자집 자녀들에게 할당되다시피 하는 채용 과정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한편, 인도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이 다국적 농업 기업들에 “인도를 떠나라”고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 구호는 영국의 인도 지배를 끝낸 1947년 운동에서 따온 것이다. 농민들은 미국산 농산물이 인도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최빈층 인도인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디 정부와 미국 사이의 협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에 분노하는 노동조합도 시위에 가세했다.

이처럼 오늘날 불만에 찬 사람이 많은 것은 세계화의 전성기에 국제 은행가들이 찬양한 “인도의 경제 기적”의 실상을 증언한다.

남아시아의 수억 명은 더 높은 학력을 쌓으면 경제 성장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일자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인도 전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 대부분이 실업 상태다.

동일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 2025년 네팔에서 있었던 분출의 배경이 됐다. 그 분출은 매년 지배계급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고 기존 정권을 끌어내렸다.

인도의 모디도, 파키스탄의 군부도 ‘다음이 내 차례인가’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외신 종합

▶ 4면에서 이어짐

이날 국힘 장동혁 지도부는 (원내 대표·부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사무총장, 대변인 등 당권파 의원 20명(의원단의 18퍼센트)과 원외 당협 위원장들까지 동원해 올림픽공원에 갔다. 5·18 역사 부정 국회 토론회를 연 이진숙도 참석했다.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 캠페인이 눈에 띄었다.

전광훈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재명 퇴진, 부정선거론, 5·18 북한군 개입설, 육사 폐지 반대, 한미동맹 사수·강화 등 전통적 극우 구호가 주를 이뤘다. ‘올공’ 집회에도 참가한 전한길은 광화문 집회 연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광훈 측은 당내 배신자들과 싸우는 국힘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내 장동혁 노선 비판자 다수는 강성 우파층을 핵심 기반으로 다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총선에서 극우를 간판으로 내걸고 이기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는 주장일 뿐이다. 자유대학 청년 극우들이 외연 확대를 위해 “부정선거” 구호를 숨기자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좌파 정당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위기 속에서 우파는 기층 대중의 사기 진작이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좌파는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이재명 정부를 사안별로 비판하면서도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진보당 당권파 연합이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불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 청산과 반극우 투쟁은 민주당과 동맹하고,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 개혁에서는 독자적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중전선 전략 탓에 독자적인 사회 개혁 운동보다는 반우파 민주 연합 전선 유지가 더 우선이다.

8월 15일 진보당계가 주도한 8·15 자주평화대행진 집회는 미국의 제국

주의적 횡포에 대한 반대 주장은 잘 표현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고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나 독자적인 운동 전망 제시는 없었다.

오히려 자민통 계열 다수는 우익과 미국의 견제로부터 이재명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지적했듯 민중전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 탓에 이들은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란 청산을 위해 그런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가진 힘을 충분히 쓰지 않는 자기제한적 실천이다.

중국, 서방,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시대

애드리언 버드 하트퍼드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다

중국과 서방 간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우세했던 이데올로기는 세계화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산업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과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미국산 첨단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자본을 본토로 불러들이겠다고(‘리쇼어링’)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중국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국가가 전보다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하는 양상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르크스는 국가론에 관해 그다지 많은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전통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다.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소련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국가자본주의론이 중요한 돌파구다.[국역: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2011, 책갈피)] 소련은 국가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

돌파구

클리프는 자본주의가 세계적 생산양식인 만큼 어느 한 부분도 전체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클리프는 소련이 해외에서 서방과 벌이는 경쟁이 소련 국내에서 발전의 역학과 동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소련이 가진 경쟁 수단은 노동력 착취를 통한 자본주의적 발전뿐이었다. 그에 따라 1928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스탈린의 반(反)혁명이 이뤄졌고 소련 국가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스탈린도 이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진국보다 50~100년 뒤쳐져 있다. 10년 안에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분쇄할 것이다.”

이런 노선에 따라 1917년 혁명의 유산이 철저히 파괴되고 전혀 새로운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됐다.

중요한 것은 소련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국가자본주의는 더 광범한 추세였다는 것이다. 당시는 ‘국가자본주의의 시대’였다.

그 시대는 19세기 말에 시작돼 1960~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각국은 저마다 공업 육성, 해군·육군 양성에 매진했다. 양자대전 종전 후 식민지들이 독립했고, 신생 국가들은 부족한 민간 자본을 대신해 국가를 동원해 자국의 자본주의를 건설했다.

토니 클리프가 이론적으로 기초로 삼은 사람 한 명은 불세비키 이론가 부하린이었다.

부하린은 생산·무역·투자의 국제화 경향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일국화(국가화)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이 국가와 가까워지고 해외 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이다.

국제화와 국가화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편, 고전적 국가자본주의 시대에 뒤이어 일어난 신자유주의 반혁명명은 점차 커지고 있던 국가의 구실을 되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쟁취한 개혁들을 후퇴시키고 자본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국가 개입은 악(惡)이고 자유시장이 선(善)이다’라고 떠들어대던 영국 마거릿 대처 정부 하에서도 국가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이런 추세는 토니 블레어, 즉 노동당이 배출한 가장 우파적인 총리 하에서도 이어졌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하는 구실의 증대를 둔화시켰을 뿐, 되돌리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도 국가의 구실이 전면 축소되거나 19세기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야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정학적 확장의 핵심 지렛대로 활용되는 희토류 생산 기업들

중국 국가자본주의 vs 미국 국가자본주의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38퍼센트이고, 중국은 33퍼센트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더 높다. 다만, 이 자료에는 국유 기업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에는 국유 기업이 사실상 전무한 반면, 중국 경제에서는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자본주의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의 한 변형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마오쩌둥 시기와 사뭇 다르다. 마오주의로부터 상당한 후퇴가 있었고, 공산당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유기업은 경제 산출물의 30퍼센트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략적 계획 경제가 여전히 있다. 옛 스탈린주의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지독하게 낭비적이다. 계획은 국가가 세우고 집행은 지방 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省)마다 고속철도를 놓으려 하는 바람에 텅텅 빈 열차가 운행되고, 중복으로 건설돼 쓸모없게 된 고속도로도 많다.

그러나 계획 경제의 다른 측면도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그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좁히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것이 바로 국유은행들이다.

나아가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하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주요 기업들은 이사회에 공산당 간부를 일정 비율 포함시켜야 했다.

또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서 공존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이런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한다. 중국이 통제하는 전략적 부문으로는 희토류 등의 전략 광물이 있다.

오늘날 중국은 희토류 시장의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매겼을 때, 시진핑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구축할 때에도 희토류에 대한 준독점적 지위를 이용한다. 그런 대상의 하



미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제하고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지키려 한다. 2025년 UAE와 AI 협력을 발표하는 트럼프

국가 개입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것인가?

나가 사우디아라비아다.

히트류 다음으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녹색' 기술이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선두 주자다. 태양 발전도 빼놓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국들의 지배자들은 자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중국은 관련 분야의 국가 소유 기업들을 통해 중동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소프트파워는 별로 없다. 중국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는 물질적인 장비나 기술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이다.

구글 등 미국 IT 자본들은 AI를 위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짓고 있다.

그런데 AI는 그저 민간 기술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AI를 이용해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에서 표적을 산출한다. 이스라엘의 디지털화된 대량 살상 산업은 미국 국방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 결과 이른바 '실리콘 방패'가 형성됐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수 없듯,

이스라엘도 중동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AI를 위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구축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집해 있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참여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최상위급 GPU는 얼마 전까지도 미국 바깥으로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됐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가세하고 엔비디아 GPU 사용 허가를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스타게이트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는 만큼 미국 안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도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천인계획'(千人计划)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연구 환경, 더 나은 보수, 더 우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세계 최상급 과학자들을 대거 자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 AI 기업들은 혁명적 도전자, 반항아를 자처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군대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추세가 복지국가의 회귀는 결코 아니다. 국가 지출과 경제 개입은 늘어날 테지만, 그것은 기술적 하드파워로 자국 국유기업·민간기업의 국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약자나 청년, 아동을 지원하려고 개입하는 게 아니다.

이는 서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몇 해 전 시진핑은 '복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연설한 바 있다. 마거릿 대처와 죽이 맞을 것 같은 그 발언은 그가 추구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그런 만큼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것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의 경제 개입 강화와 신자유주의가 병존하는 혼합물일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신자유주의의 상당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일부 좌파가 국가 개입 자체를 사회주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라는 형식에 시선을 뺏기면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자본가 계급들이 빚어내고 있는 미래는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스토피아다.

중국 자본가들이든 서방 자본가들이든 어느 쪽이 승리하든 그 미래는 이전까지의 신자유주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며 위험하고 끔찍할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소련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로써, 스탈린주의로부터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비전을 지켜 냈다.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른거리는 지금, 그런 노동계급의 자력 행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번역 김중환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스페인 반파시즘 활동가가 말한다

극우는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 이름으로, 모로코 원명은 '세브타')의 난민 위기는 극우가 결집하는 초점이 되고 있다. 중도 세력은 극우가 의제를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우타가 “수십만 명에게 침공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스페인에 대해 생겐 협약을 일시 중지시켰다. 생겐 협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하는 협약이다.

난민 공격에 앞장서 왔던 덴마크 사민당 정부도 멜로니의 조치를 지지했다.

체코의 억만장자 우익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는 스페인에 대해 생겐 협약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우는 세우타에서 시위를 계획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결국 시위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22개국이 참가한 긴급 회의가 8월 4일에 열렸다.

유럽 극우 지도자들은 이민 통제를 강화하도록 스페인을 압박하려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번 위기를 국경 통제 체제인 ‘요새화된 유럽’을 보강할 기회로 삼는다. 이 ‘요새화된 유럽’은 철조망, 국경 경비대, 전투기, 전함을 통해 지중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다.

올여름부터 시행된 유럽 이주·망명 협약은 유럽연합의 국경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다.

또 유럽연합은 월경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모로코·리비아·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정권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금도 세우타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500미터 길이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 체제가 초래하는 죽음은 세우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소 67명이 세우타에 들어가려다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수가 바다에서 익사했다.

세우타에 들어온 6만 명 중 대부분

은 세우타를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폭력과 혹독한 조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시신 여러 구를 봤어요. 굶주림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했어요. 48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 먹어서 견디기 힘들네요.”

어떤 이민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어느 이민자의 손을 칼로 긁고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봤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은 스페인이 유럽에 이민자들을 들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전까지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이민에 관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트럼프, 멜로니,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 같은 자들은 산체스가 올해 초 시행한 조치를 거둬들이게 하려 한다.

올해 스페인 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2020년 이민자들의 대규모 집회 등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

그러나 산체스 정부가 이 조치를 도입한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스페인 대기업들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산체스는 EU의 국경 통제 정책을 지지하며,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의 영향력을 지키려 한다.

세우타 위기를 둘러싼 극우의 공격에 대응하려면 산체스는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 전환과 ‘요새화된 유럽’의 종식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산체스는 “스페인 주권 침해” 운운하며 난민들의 월경을 막으려고 군대를 투입했다.

산체스는 유럽연합 국경을 지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반도 국가들보다 적은 미등록 이민자를 들인다고 자랑하는 순위표를 발표했다.

한편, 세우타로의 월경을 허용한 모로코를 탓하는 주장이 많다.

2021년 모로코 당국은 세우타 접경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스페인 정부가 서사하라 독립 운동 지도자의 자국 내 치료를 허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스페인은 모로코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서사하라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약 8억 유로(1조 3,000억 원) 규모의 무역 협정을 맺어 스페인 기업의 모로코 투자를 장려했다.

‘요새화된 유럽’

한편,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5억 유로 규모의 “불법 이민” 단속 지원금을 모로코에 제공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해 산체스 정부는 세우타 해안 경비 비용으로 3,000만 유로를 제공했다.

모로코 정권은 무역과 이민자 탄압 모두에서 스페인의 중요한 협력자인 것이다.

그러나 서사하라 독립 운동을 지원하는 알제리가 스페인과 단교했다. 알제리는 무역 협정을 파기해 스페인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스페인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알제리에 의존한다.

7월 20일 산체스는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천연가스 공급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알제리 대통령과 만났다.

카탈루냐의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연합’ 활동가 다비드 카르발라는 모로코 국가가 이민자들의 월경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애초에 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생기자마자 국경을 넘으려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국경을 넘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에 오고 싶어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든 사회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여러 이유가 있죠.”

스페인 대법원의 7월 8일 판결 이후 국경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스페인 법원은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심사 없이 추방할 수 없고, 오직 “물리적 장벽”을 넘은 사람들만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로코 정권과 관계를 다져 왔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스페인이 모로코에 있는 세우타와 멜리야를 지배하는 것을 기회주의적으로 비난해 왔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자들은 이번 위기를 스페인 정부를 두들길 기회로 삼고 있다. 산체스는 팔레스타인과 이란 전쟁 문제에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원칙 있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번 위기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는 것과, 세우타 “침공”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시온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다른 것이다.

카르발라는 스페인 일각에서 이 문제에 관해 “스페인 수호”를 운운하는데 좌파 일부도 가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사람들은 스페인 보안군이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익사시키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바다에서 익사하고 있어요. ‘스페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도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군비 지출을 갑절로 늘렸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난민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반대해야 한다고 카르발라는 강조했다.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애초에 스페인이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좀처럼 제기되거나 거론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식민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나쁜 계약’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서울에서 힘찬 투쟁

8월 1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나쁜계약 철폐! 재고용 보장! 노조 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 공동행동 대회’가 열렸다.

약 400명이 힘차고 활기차게 집회를 벌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80명 넘게 참가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대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날 집회는 울산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첫 상경 집회였다. 이들은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주도로 사용자 측이 계약서 변경을 강요하는 것(‘나쁜 계약’)에 반발해 두 달 넘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사용자 측은 투쟁을 달래려고 일부 양보했지만, 여전히 기본급 삭감 등 나쁜 계약 자체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쟁에 앞장선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은 8월 여름 휴가 고향 방문까지 취소하며 집회를 조직했다고 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대표해 차리타 씨(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서울 도심을 누비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조합원)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퍼센트 임금 수준을 약속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임금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사람 목숨에 매기는 가치는 고작 170만 원의 기본급, 임금 삭감, 보너스 한 톨 받지 못하는 처지인가 봅니다. …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회사 측에 분명히 밝힙니다.”

차리타 씨는 “한국은 비위 혐의로 전직 대통령 네 명을 수감한 전례가 있다”며, 회사 측의 이주노동자 차별

도 그런 부패 사례라고 규탄했다.

기자가 집회에서 만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많은 비용을 치렀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경우도 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 측이 ‘나쁜 계약’에 서명 안 하면 본국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11월 말경에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간지회의 방

글라데시인 조합원 알리 씨도 연단에 올랐다. 김제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일장은 최근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하며 그들을 해고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항의해 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저와 많은 동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계약 거부 하나로 우리의 일터뿐 아니라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종로와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빨간 깃발을 흔들며 찌렁찌렁하게 구호를 외치는 현대중공업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이 행진 대열의 선두를 이뤘다. 이주노동자들의 활력 있는 행진은 연휴를 맞아 거리에 나온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준형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교섭 의제로 삼자고 하고,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가 확산한 것을 보며, 이재명이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쟁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리해고, 외주화, 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시켜, 쟁의 행위가 이른바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여지를 줄였던 것이다.

이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벌인 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 준 현실을 일부 반영한 법 개정이었다.

줬다 뺐기

그런데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기업주와 우파들의 반발을 수용해 이미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벌여 왔다.

지난해 말에는 시행령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크게 제약한 바 있다.

또 행정지침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술 더 떠 쟁의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더 개악하려 한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국민의힘과 기업주 등 우파들은 노란봉투법 자체를 개악하라고 더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 후퇴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이재명 정부의 중도 자유주의가 점점 더 친자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심화되는 국제 경쟁 압력 속에서 자본 축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줬던 개혁도 뺐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보듯 노동조

건 악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악 등을 비판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서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돼야 한다.

정선영

용어설명

교섭창구 단일화

한 기업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과반 노조 한 곳에만 교섭권을 주는 것. 소수 노조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다시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미국은 왜 철수했던 핵을 재배치하려 하는가

미국 전쟁부가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난호에 실린 ‘전술핵 확대 검토하는 미 전쟁부: 동아시아를 핵전쟁의 전장으로?’를 보시오.)

한국과 일본이 전술핵 전진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부 유럽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는 이미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이는 처음이 아니라 재배치다. 미국의 전술핵은 1957년 한국에 처음 배치됐다가 1991년 12월 철수했다. 이 기간에 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 대통령에게만 핵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보고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지낸 돈 오버도퍼는 한국 정부 관리의 말을 빌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금기 사항이었다. 핵무기는 너무나 가공할 무기였으므로 논의조차 금지돼 있었다.”(《두 개의 한국》, 길산, 387쪽)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소련 극동군과 북한을 겨냥했다. 고(故) 리영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남한의 영토, 즉 지상 배치의 핵무기는 소련 영토 자체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보다도, 소련의 극동군에 대한 견제 역할이 하나 있었지요. … 주목적은 남한에 미국 지상군이 주둔하는 한,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핵반격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212쪽)

이에 따라 핵탄두는 비무장지대 부근에 집중 배치됐다. 주한미군은 훈련 때마다 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헬리콥터로 수송했다.

소련 붕괴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했다. 1991년 9월 27일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는 전 세계에



한국이나 일본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동아시아 핵군비 경쟁 격화로 이어질 것이다

배치된 미군의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도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한국 내 핵무기 철수가 완료됐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은 지정학적 대변동이였다. 1989년부터 동구권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결정적 계기는 1991년 8월 중순 소련에서 일어난 제2차 붕괴였다. 공산당 보수파가 동유럽 정권의 붕괴, 소련 내 소수 민족 운동의 분출, 노동자 투쟁의 부상에 맞서 고르바초프를 감금하며 군사 쿠데타를 기도했다. 그러나 대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제 권력은 고르바초프의 당시 라이벌인 보리스 옐친에게로 넘어갔다. 이로써 소련 해체가 본격화했다.

미국 권력자들은 통제력을 잃은 소련의 전술핵이 ‘테러 집단’이나 제3국으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고 폐기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소련이 자국 전술핵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이었다.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었다.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다. 미국은 군비 경쟁을 통해 소련이 대적할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소련을 경제적

으로 압박하고자 했다. 실제로 미국은 군비 경쟁으로 소련권의 경제 구조를 무너뜨렸지만, 미국 경제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다른 서방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약화됐다.

여기에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고조로 발생한 정치적 문제를 피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요동치는 탈냉전 질서

그러나 탈냉전 질서는 다시 요동치게 됐다. 소련 해체 이후 한동안 미국은 이렇다 할 적국의 도전에 직면하지 않은 채, 전 세계 금융·기술·동맹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더는 1991년에 누렸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누리지 못한다. 오늘날 이란 전쟁은 미국이 가진 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로 인해 미국 힘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생겨났다. 로버트 페이퍼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는 “탈냉전 질서는 미국의 강압 능력보다 신뢰성의 힘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썼다(‘Iran and the New Rules of Global Power’, 《포린 어페어스》, 7월 24일 자).

이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지배자

들도 미국이 자국 안보를 지켜 줄지 의문을 품는다. 전술핵으로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1970년대 초중반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1970년대 초 남베트남이 패망 위기에 처하자 박정희는 안보 불안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 즉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핵심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이었다. 미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만약 핵무기 생산 계획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체의 안전 보장을 백지화하겠다” 하고 통고했다.

동시에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달래고자 한국 내 핵무기 배치를 대폭 확대했다. “핵무기 전문가인 윌리엄 어킨이 입수한 미국 정부의 문건에 따르면 72년 남에 배치된 핵탄두는 총 763개로 사상 최고 규모였다.”(돈 오버도퍼, 위의 책, 384~385쪽)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안심시키고자 북한을 상대로 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1975년 6월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 실제 그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현재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으나, 당시에는 경제적·군사적 능력이 급성장하는 지정학적 경쟁국이 없었다. 당시 소련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게다가 소련과 중국은 서로 소규모 전쟁을 벌일 정도로 관계가 악화돼 있었고 대립하는 관계였다(중소분쟁).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필적 상대로 부상했다. 북한은 핵무장국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 변화로 인해 미국의 전술핵 전진 배치가 한국 지배자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가속해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공산이 크다.

김인식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것은 7월 21일이다. 8월 18일 현재,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흘러 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식이다.

노동부는 7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의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된 안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해 만들고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언제든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이 법을 심사할 상임위는 기후노동위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과의 모순을 피하려고 아예 관련 논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이렇다. 소득 상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한다.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을 늘린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쓴 뒤 2년 더 쓸 수 있게 한다. 선택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일부 노동자들만(3퍼센트) 겨냥하는 듯한 이 ‘예외’는 무엇



임금이 얼마든, 착취받기는 마찬가지 일부 반도체 노동자들만 노동법의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보다 기만적이다. 그럴 거라면 노동법이 아니라 ‘3퍼센트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조건(착취 받는다는)에 놓여 있음을 자본가들조차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퍼센트?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의의 핵심은 관계다. 소득 수준도, 직업의 종류도, 자기 정체감도 아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가, 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는가이다. 마르크스가 《신성가족》에서 쓴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가 관건이다. 베버식으로 시장 지위와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면 “만국의 치과의사여, 단결하라”가 되고 만다.

마르크스의 계급 정의에 따르면 제 아무리 임금이 많더라도 모든 노동자

는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즉,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을 임금으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3퍼센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 예외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주장은 자본 축적을 우선순위에 놓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예외’ 주장이 기만적임은 아직만 들어지지도 않은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요구가 이미 네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은 7월 31일,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안기현은 평택과 용인까지 포함해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권 거점으로 특구 범위를 넓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제 4년 연장안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2년은 너무 짧고 5년 차가 돼야 숙련이 쌓인다”고 말한다. 숙련이 이유라면 답은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히고 청와대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만만찮은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고 숙고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호중

▶ 12면에서 이어짐

해 국내 로봇 양산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육군참모차장은 피지컬 AI가 실제 전투력이 되려면 야전 실증과 그 결과의 제도 반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에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군사력은 다시 기술 발전에 기대야 한다. 고전적 제국주의의 논리가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못했지만, 그 아류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곱 개 씨앗 가운데 네 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주체가 된다. 비경수형 SMR, 핵융합, K-퀀텀(양자) 파운드리, 유전자 세포치료제다. 국가가 돈을 대고 자본과 함께 법인을 세우면, 그 법인이 낸 이익은 국가가 정한 다음 전선으로 투입된다. 여기서도 국가와 자본의 융합이 사업 계획서의 형식으로 표현됐다.

김정관은 노동시간 규제를 두고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이 국가 간 경쟁에 종속되는 것이다.

부하린이 110년 전에 관찰한 국가자본주의화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

전과 ‘세계화’를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움직이지만 그럴수록 자기 나라 국가의 힘에 더 기대고, 국가는 그 자본을 자산 삼아 다른 국가-자본 블록과 겨룬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무기로 쓰고 중국이 그에 맞서 자립을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의 국가와 자본은 그 틈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메가프로젝트는 한미동맹 현안과 함께 논의된다. 7대 SEED 중 세 가지는 국방을 목적으로 명시했고, 피지컬 AI를 위한 시장은 무기화에서 마련

하기로 했다. 반도체에서 나온 이익이 어디로 갈지도 이미 문서에 명시돼 있다. 전격전은 비유가 아니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젠더는 무엇이고, 왜 정치적 전장이 됐나?
- ★ 영화평 <오디세이>
- ★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전제군주)

장호중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에는 미 7공군 시설도 있다. 지난 7월 10일 미 7공군은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시기까지 못 박아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미국 AI 기업 CEO들을 잇달아 만난 것은 미국 정부와 미군의 협조를 얻어 내려는 포석이었던 듯하다.

같은 브리핑에서 강훈식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전력과 용수, 교통은 물론 주거와 교육 여건까지 서둘러 갖추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승인’하기 위한 형식이 됐다.

정부 문서는 이 사업에서 하는 자신의 구실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라고 적었다. ‘지원’이라지만,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원 목록도 길다.

예외의 목록

통상 10년 넘게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5년 이하로 줄인다. 지역별 전기 요금제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만든다. 2030년까지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대고, 2028년 말부터 1단계 송전 선로를 놓기 시작한다. 전기 요금의 2.7퍼센트를 차지하는 전



경제 성장의 단초가 군사력에 있다는 군사주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에 수석급 전담 조직을 두고, 총리실에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8월 13일에도 ‘예외’가 추가됐다.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그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따로 허가받게 하고, 국가산단을 도시핵심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맡을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울타리 없이 일하는 이른바 ‘펜스리스’ 협동로봇의 안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기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밝힌 대목은 세금이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 면제의 근거로 재정경제부는 “국비지원이 50퍼센트인 점, 의사결정 주체가 공공과 민간 동물로 구성돼 있는 점”을 들었다. 부하린이 국가와 자본의 융합이라고 부른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가 감세 사유서로 기술된 것이다.

지난달 8일 보도된 메가특구 특별법 검토안에는 규제 담당 공무원의 면책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와 관련된 규제특례 업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골자”이고, “특별법에는 부처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전면 면제 조항을 두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JTBC 뉴스)

산업별로 전권을 전 총괄 책임자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마약 같은 분야에 강력한 권한을 준 관료를 임명할 때 역겹게도 ‘차르’라는 말을 쓴다. 원래 이는 100여 년 전 혁명으로 타도된 러시아의 절대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중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인 셈이다. 김정관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로봇 차르를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주들을 위한 총력지원체계

이틀 뒤인 8월 12일 청와대는 또 다른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일곱 개 기술을 골라 ‘7대 SEED(씨앗)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혁신의 씨앗이

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썼다. 이번에도 “총력 지원체계”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로 창출된 자본을 재투자하는 등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속·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초과이익을 메가프로젝트에 쓰겠다더니, 메가프로젝트에서 나올 이익은 다시 7대 SEED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익 ‘공유’는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주들 사이의 분배를 뜻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일곱 개 기술을 묶은 기준이 “경제·안보”라는 점도 메가프로젝트와 흐름을 같이한다. 첫 항목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산단,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열 공급원”으로 규정됐다. 양자기술은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선도전’ 항목에는 국방반도체가 들어 있다.

8월 10일 회의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사들이겠다고 보고했다.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 구매가 어디서 시작될지는 나흘 뒤에 드러났다.

8월 14일 산업통상부와 육군,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방 로봇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계·정찰·지속지원·물류 등 국방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 확대”가 협약의 내용이고, 산업부는 “국방, 치안, 재난 대응 등 공공수요 창출을 통

▶ 11면으로 이어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시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일시 8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파즈홀 (서울역 1번출구)

발제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통역 제공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모임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